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0차 회의록

1. 회의개요

1 일　　시 : 2026년 9월 17일 (목) 10:00 ~ 12:00

2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413호)

3 출석위원 : (위원장) 차정인
(상임위원) 김경회, 이광호
(위원) 김　건, 김영도, 김　용, 박영환, 반상진, 손덕제, 연취현, 윤건영, 이보미, 이　현, 장신호, 전은영
(총 15인)

2. 회의내용

1 성원보고

○ 재적위원 20인 중 15인 출석으로 성원

2 개회 및 모두말씀

○ (간사) 위원장님의 개회선언과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지금부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 반갑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입니다.
- 제가 위원장 직무를 맡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 국가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 모아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사무처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는 10월 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련될 워크숍, 그리고 논의의 장 등을 통해서 발전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첫 번째 안건은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최종 보고입니다. 이는 지난 8차 회의에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자구수정 위임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그 위임된 최종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입제도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 보고입니다. 숙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안건 등 공개 여부 결정

○ (보고안건)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최종 보고' 공개

○ (보고안건) '대입제도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 보고' 공개

○ (보고안건)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중간 보고' 비공개

4 활동 보고

○ (간사) 이어서 지난 회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관하여 사무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국가교육위원회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활동 보고입니다.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33차 회의가 9월 4일 금요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발제와 검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6차, 제27차 회의가 9월 7일 월요일, 9월 9일 수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양일간의 회의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정책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제18차 회의가 9월 3일 목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전문위원회에서는 대입제도와 관련한 의견수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입니다.

-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9월 3일 목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의 주요 정책 의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문해력 특별위원회 제9차, 제10차 회의가 9월 8일 화요일, 9월 15일 화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문해력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국민 참여·소통 및 의견수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학입학제도 공론화 TF 제7차 회의가 9월 10일 목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의 숙의토론 결과에 대한 분석 방향 검토가 있었습니다.

- 통합지원단 제16차 회의가 9월 11일 금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지금 국민의견수렴·조정 요청이 국민의견수렴플랫폼을 통해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최초로 9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한 사안이 나왔습니다. 8월 26일에 게재된 의견입니다. 초등학교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해서 9월 9일 기준으로 54,121명이 동의를 해서 지금 의견수렴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보고를 거쳐서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사전검토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음 번 본 위원회 정기안건으로 국민의견수렴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활동 보고에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면 활동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5 주요 내용

가. (보고안건)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최종 보고

○ (간사) 다음은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최종 보고에 대해 보고자A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자 A)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경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논의와 현장토론회 등 국민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을 지난 8차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요. 일부 자구수정을 조건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신 바에 따라서 위원장, 두 상임위원, 특위 위원장이 참석해서 검토 회의를 실시하였고요. 본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해서 원칙(안)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다음은 수정사항입니다. 먼저 명칭에서 '국가'를 삭제하였고, 전문의 내용 중 '무조건적 중립' 표현을 교육을 회피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였으며, '한국형'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교육자'와 '교사'가 포함된 조문의 경우에는 모두 '교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 아울러 제13조에서 논쟁적 사안을 주제로 다룰 때 국가교육과정과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다는 표현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 제1항에서 학생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이 교육적 목적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제2항의 '교육활동'을 '학교시민교육 활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모호성이 있다고 지적하신 '외부의 부당한 압력' 부분에서 '외부'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 원안·수정안 대비표와 수정사항이 반영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제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보고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게 토론해 주신 내용의 요지를 간추려서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인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임하신 대로 잘 되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

○ (손덕제 위원) 제14조(안전성의 원칙)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학생은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다양한 자치 활동 및 교육적 목적에 따른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학생들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사회 활동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활동까지 포함되는지, 또 참여를 결정하는 주체와 절차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그리고 학생들이 자치 활동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것과 또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은 굉장히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지금도 체험학습이라든지 어떤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 때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또 결재를 받은 것에 의거해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이해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내가 교육적 목적으로 밖에 데리고 나가도 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라는 말이 추가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부분은 위임받은 분들이 논의를 해서 이것을 적합한 표현으로 생각하고, 이런 규정은 간명하게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붙이지 않고 이 문구는 위임하는 분들이 다 좋다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학교에서 학생의 자치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을 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요. 당연히 교육과

정에 따라서 해야 되고, 교육 목적에 맞게 해야 되고, 담당교사의 지도에 따라야 되고, 학교 교육계획에 명시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는 정확하게 지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학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시민교육에 특별히 그것을 다시 한번 재차 적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전계획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교육부 등에서 필요하면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잘 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손덕제 위원) 위원장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조 2에 보면 학교장이 교육 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기관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인가·허가 여부,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여부, 프로그램 및 시설의 안전성 등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학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책임에 대한 소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운영지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데리고 나가서 ‘저는 이 지침으로 당연히 데리고 나가도 되는 줄 알고 데리고 나갔습니다.’라고 했을 때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막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조문은 참여의 가능성과 자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외부 활동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기존 학교의 내부 규칙에 따라서 해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취지는 저도 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현재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이런 말을 이 조문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를, 간단히 의견을 나누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회 상임위원) 결국은 안전사고 문제가 보상 문제거든요. 별

도로 학교장 허가를 득한다는 그 표현을 안 넣어도 소위 말해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사고예방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 (손덕제 위원) 선생님이 이 문구를 보고 나는 데리고 나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안전사고가 났다면 내가 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춘천의 학교에서 사고가 난 뒤부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해서 법적 조항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당연히 그것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나가야지 안 받고 나간 선생님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선생님의 귀책사유로 돌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지금 외부에서 교사가 교육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전계획을 세우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여기 규정에 따로 더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영환 위원) 이것이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인데 내용이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손덕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학교에서 고려해 볼만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만 해도 6학년 담임 할 때 위안부 기림일 지역행사에 학생들과 참여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 임의로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지 못했고, 그 행사 참여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얘기하고 논쟁적으로 좀 얘기가 진행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과정에 의거한다고 하는 원칙, 그리고 교사는 교장의 명이 아니라 법령에 의거해서 교육한다는 원칙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안전법에서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그 범위를 또 명시해 놓았습니다.

-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순리를 보면 교육과정에 의

거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서 교육 활동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조문에 다 비슷한 형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는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다면 그냥 이 정도 표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손덕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리고 나가는 것과 학교 안에서 교육하는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현재 제도가 학생을 데리고 나갈 때는 이미 안전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을 다시 한번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 활동할 때에 대해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오늘 보고안건으로 올린 부분은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요. 앞으로 교육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되고 진행이 되려고 할 때 손덕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려가 되어서 가이드라인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손 위원님, 그러면 오늘 회의록에 다 남으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14조의 경우에 외부에서, 학교 바깥에서 교육적 목적에 따른 교육 활동을 할 때는 안전사고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라든지, 또 안전계획이라든지,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는 문제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회의록에 남기고 이 원안은 통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손덕제 위원) 예. 그렇게 정확하게 선생님들한테 안내가 되고 그런 우려만 없다면 그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임안대로 정리가 잘 되었다고 보고 지난번에 의결은 되었지만 오늘로써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의 전문 내용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 이로써 전문이 확정되었고 현재 이 전문 내용은 보도가 되고 국민에게 알려져도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함의가 있는 중요한 의제들, 합의가 잘 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육, 학생의 성장에 집중해서 논의한 결과, 이렇게 전원일치 합의를 얻어낸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사회에 알리는 시사점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다 성심껏 모아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나. (보고안건) 대입제도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 보고

○ (간사) 이어서 대입제도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 보고에 대해 보고자 A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자 A)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 보고를 국민참여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7년까지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이 중에 핵심의제 중 하나로 미래 대입제도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핵심 검토의제를 기존에도 제시 드린 바 있고, 관련해서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대입제도이기 때문에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국민의 의견을 내실 있게 수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미래 대입제도 방향과 핵심 검토의제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를 실시해서 숙고된 국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견수렴 의제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위해서 대입제도 공론화 TF를 구성·운영하고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진행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 의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방향과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입니다.
- 다음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개요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위원회 대입제도 숙의는 8월 29일부터 8월 30일 1박 2일 동안 YBM 연수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참여위원 203명께서 신청하셨으며 불참자가 일부 있어 최종 180명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참여한 180명에 대한 인적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0대 이하가 약 9.5%, 20~30대가 36%, 40~50대가 32%, 60대 이상은 22.2%가 참여하셨습니다. 수도권이 41%, 비수도권(광역·특별시)이 26.7%, 비수도권(그 외 도)가 32.2% 참여하셨습니다.
- 직능 같은 경우는 참여하신 분들이 복수선택을 하셔서 180명보다 더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유·초·중·고 자녀 학부모, 대학생 자녀 학부모, 유·초·중·고 교원, 대학·전문대학 교직원, 교육행정·연구기관 종사자, 사교육기관 종사자, 기타 인원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비율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행방식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미래 대입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이후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심화된 쟁점까지 다층적으로 토의했습니다. 세션1은 미래 대입제도 방향성을 토의하였고, 세션2부터 세션6은 서·논술형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상세계획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소그룹은 7~8명으로 구성하고, 소그룹 내에서 지역·연령·성별·직능을 고르게 배치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공개하였고 숙의 전후 동일 질문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아래 표를 보시면 크게 대입제도에 대한 방향성,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의 입장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입장에 대한 질문, 우려사항과 비중·시기·도입 방식에 대한 인식, 서·논술형 평가의 기대와 우려에 대한 인식, 서·논술형 평가 관련 준비 필요사항에 대한 인식, 숙의과정 자체에 대한 설문입니다. 특이사항은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와 수능 서·논술형 평가의 입장은 4점 척도로 조사를 하였고, 그 외에 기대와 우려, 준비 필요사항은 '보통이다'가 포함된 5점 척도로 진행하였고 이는 공론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 주요 숙의 결과입니다. 먼저 미래 대입제도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평가와 선발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고, 대입제도 변화를 통한 학교 교육과 학습 변화를 선도하는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응답 비율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선택지 중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관련된 입장입니다. 숙의 참여자 중 72.8%가 고교 정기시험에서 서·논술형 문항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매우 필요함'과 '필요함'이라는 응답을 합친 비율입니다. 숙의 이후 필요 입장은 소폭 감소하였고, 불필요 입장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입장의 강도를 고려한

평균점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연령에서 고교 서·논술형 문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40대가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능에서 서·논술형 문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유·초·중·고 학부모와 대학 학부모가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숙의 참여자 중 55.5%가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숙의 후 필요 응답자는 소폭 감소하였고, 불필요 응답자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평균점수는 2.64점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밑에 박스를 보시면 참고로 불필요에서 필요, 필요에서 불필요로 입장을 이동하신 분이 각각 15명과 22명이고요. 불필요에서 필요로 입장을 변경하신 분들은 대체로 서·논술형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 응답 점수가 높아지면서 필요 입장으로 변경하셨습니다. 필요에서 불필요 입장으로 변경하신 분은 주로 우려사항에 대한 점수가 높아지면서 이동하였고, 이 중에서 자유기술항목을 분석해 본 결과 구체적인 로드맵, 채점체계, 시범운영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외에 수능 자격고사화, 수시 비중 확대, 대학별 논술 선호 등의 기타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숙의 후에 10대, 고등학생, 대학·전문대학 교직원의 필요 응답자가 증가하고 40에서 60대, 교원, 학부모의 필요 응답자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신 분, 그리고 유보적인 응답을 해 주신 분 중에서 자유기술항목을 본 결과, 대부분은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주셨고, 일부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시범 도입 준비 등 요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 별표에 자유기술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놓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필요는 하나 시범 도입 등 검증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 다만, 시기나 방법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은 준비 부족으로 반대했지만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조건부 찬성입니다.’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장에 이어서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입니다.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기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논술형 평가의 기대에 대한 동의율은 높았습니다. 특히 서·논술형 평가가 수업 방식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하단에 표가 있고 붙임1 자료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유·초·중·고 교원, 대학·전문대학 교직원, 교육행정·연구기관 종사자 등의 효과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숙의 후에 서·논술형 평가 효과성에 대한 동의 정도(평균점수)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우려 부분입니다. 우려사항으로는 평가공정성 우려, 사교육 의존 심화, 교육 격차 심화 등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율이 높았고, 그 중에서 채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습니다. 대체로 유·초·중·고 학부모의 우려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유·초·중·고 교원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숙의 후에는 우려 정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평가 공정성 우려 정도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우려를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숙의 전에는 우려에 대한 평균점수가 기대에 대한 평가점수보다 높았습니다. 1박 2일 숙의한 후에는 기대에 대한 점수는 오르고 우려에 대한 점수는 낮아져서 기대에 대한 평균점수가 우려에 대한 평균점수보다 높아졌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인식과 준비 필요사항입니다. 먼저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도입 방식·비중·시기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습니다. 도입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부 영역 도입 후 확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일부 영역에 도입’, ‘도입 반대’, ‘전 영역에 도입’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출제 비중과 관련해서는 ‘40% 미만’, ‘도입 반대’, ‘40~60%’, ‘60%

이상', '100%'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2037~2038학년도', '도입 반대', ' 2033~2034학년도', '2035~2036학년도'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숙의 후에 전반적으로 도입 방식, 출제 비중, 도입 시기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응답이 증가하셨습니다.

- 하단의 박스를 보시면 아까 앞서 1번 항목에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시는 분이 75명이었는데 구체적인 도입 방식, 비중 시기에 대해서 응답하신 분은 40명이고, 그 외에 '도입 반대'에 응답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능 서·논술형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 주시고 도입 반대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이 4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세부적으로 본 결과, 전 연령, 직능에 분포하고 있으나 주로 10대, 40대, 학부모, 유·초·중·고 교운 그룹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분들은 주로 '일부 영역에 도입'이나 '40% 미만 출제', 2037~2038학년도 도입'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 다음으로는 서·논술형 평가 준비 필요사항입니다. 고교 내신과 관련해서 필요사항을 가 항목부터 자 항목까지 인식조사를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높아서 필요하다고 응답을 주셨고, 사 항목과 아 항목처럼 공정성 관련된 항목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았습니다.
-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관련해서 준비 필요사항에 대해서 가 항목부터 바 항목까지 질문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4점대 이상으로 높게 나왔고,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 출제'와 '채점기준 공개', '이의제기 절차 확립'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 다음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75.6%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공정성에

대해서는 78.4%로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참여 성실도는 98.9%가 성실하게 참여했다고 응답하였고, 92.2%가 대입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결정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가 51.1%, '보통이다'가 31.1%, '그렇지 않다'가 17.8%로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의 대입제도 숙의 결과를 국민참여위원님들께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대입제도 서·논술형 평가 관련 세부 쟁점에 대한 공론화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교위가 실시한 대입제도 현장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는 지금 분석 중으로 10월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다음 붙임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있는 붙임1은 저희가 사전·사후 설문조사 드렸던 항목에 대한 답변, 숙의 전후 응답자수와 비율에 대한 내용을 다 실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16페이지까지 진행이 됩니다.
- 다음 17페이지 붙임2를 잠깐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에서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관련해서 연령대별 세부분석 자료를 탑재하였고요. 다음 18페이지에서는 직능별 세부분석 자료를 탑재하였습니다.
- 다음 19페이지의 붙임4에서는 지역별 세부분석 자료를 탑재하였고, 마지막 20페이지의 붙임5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기대와 우려에 대한 직능별 세부분석 자료를 평균점수 기준으로 탑재하였습니다.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문이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도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사실 궁금하기도 했지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도입 일정 부분, 전면 도입만 또 얘기가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숙의과정에 보니까 일정에 대한 논의

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부분 도입에 대한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저는 아직도 조금 풀지 못한 것은 AI에 너무 전적으로 의존한 평가 방식, 똑같은 모델의 AI에게 사실 똑같은 질문을 던져도 AI조차 똑같은 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기술에 의존해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평가받겠다는 것은 아직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그다음에 도입 시기를 보니까 거의 10년 뒤, 7년 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간에 또 어떤 기술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follow up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그런데 이것은 질문입니다.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 서·논술형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수능에 반영하는 서·논술형의 필요성에서 '필요하다'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분석이 되어 있나요?

○ (보고자 A) 저희가 공론화 TF에서 한번 논의해 본 결과,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서·논술형 평가는 이미 도입이 되어 있고 비중을 확대하는 일이어서 체계들이 다 갖춰져 이미 수년 이상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그것이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더, 어쨌든 찬성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신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영환 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내신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전후에 학생들의 유의미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기본전제가 평가제도가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능에 도입한다고 하기 전에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어쨌든 단계적 확대를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내신 같은 경우에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러면 도

입 이전에 학생들의 어떤 사고력과 창의력의 척도와 그리고 지금 현재 내신에 도입했을 경우에 변화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국민참여위원회에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서 진행되는 것이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료에 근거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 (보고자 A)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번에 국민참여위원분들께 숙의를 한 것은 인식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숙의 자료이기 때문에 숙의 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인식적인 부분은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영환 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이신 것인지를 다시 묻습니다. 제가 여쭤본 내용의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 (보고자 A) 제가 알기로 그것은 별도로 다른 연구를 통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숙의에서는 그 효과성을 인식의 척도로 여쭤본 겁니다.

○ (박영환 위원) 그러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보미 위원) 이 결과를 보니까 많은 국민참여위원들께서 숙의 과정을 통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 서·논술형 평가와 서·논술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느끼는 것은 서·논술형과 관련된 양질의 교육이 시행되려면 주당 수업시수나 평가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초·중등, 고등 다 막론하고 지금 너무 많아요. 과목과 진도도 많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모래주머니를 달고 하다못해 체조를 하는 꼴이 되는데 이런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나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이런 것들이 좀 담보되지 않으면 저는 양질의 서·논술형 평가를 위한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인식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한 준비나 논의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저도 이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위원장) 오늘은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서 보고사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이고요. 대입제도에 대한 깊은 토론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우선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AI는 채점 보조수단이고요. 사실 AI 없이 사람 채점으로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구축해야 됩니다. 전문채점관 양성 등을 해야 되고요. AI가 있으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AI의 발달을 기대를 하고 AI의 발달도 하나의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채점관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전문채점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충분히 준비해서 AI 없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그다음에 지금 내신의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이보미 위원님 말씀처럼 교사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준비기간을 많이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덕제 위원)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주신 자료의 3페이지와 4페이지에서 숙의 전과 숙의 후의 수치를 보면 언뜻 봤을 때 전부 다 과반 이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를 보시면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서 숙의 전 54명과 83명은 137명, 그다음에 숙의 후에 54명과 77명은 131로

마이너스 6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도 감소가 된 것이지요.

- 그다음에 4페이지에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도 보면 숙의 전 36명과 69명을 하면 105명, 그다음에 숙의 후에 42명과 58명을 하면 100명, 이것도 5명이 감소가 된 겁니다. 오히려 숙의를 한 이후에 필요성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고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 두 번째는 사실 이것을 실제로 가르치고 행해야 할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시키면 저는 훨씬 더 낮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가 혹시 있는지가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 세 번째는 AI 보조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수시 관련해서 전산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굉장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경쟁률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큰 이슈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AI의 그런 의존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과연 대책은 있는가, 그리고 토론과정에서 이런 과정에 대해 논의를 했는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AI 안전성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는 한 보조수단으로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쓸 수가 없지요.

○ (보고자 A)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마이너스 변화를 통해서 필요 응답자가 감소한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은 3페이지, 4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이미 기술하였고요. 특히 4페이지에 있는 중간 박스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필요에서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짝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러

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채점체계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좀 더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자유기술응답을 통해서 주셨고요. 4페이지 가장 하단에 자유응답기술 내용도 보시면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기술한 것을 보면 필요는 한데 검증이 필요하다, 시범 도입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어과목만 먼저 실시하면 자기는 조건부 찬성이다 등등 언급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6페이지 중간 박스를 한번 봐주시면 수능 서·논술형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75명이 되십니다. 75명께서 불필요하다고 응답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40명은 '도입 반대'가 아니고 40% 미만을 하든 언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도입 시기나 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18페이지 붙임3번에 직능별 세부분석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네모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네모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 숙의 전에는 사실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숙의 후에는 한 절반 정도가 찬성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교원 말씀하신 부분에 유·초·중등 교원은 숙의 전에는 한 73% 찬성하셨고, 숙의 후에는 53% 정도 찬성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현 위원)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워크숍 하고 나서 서·논술 도입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자고

해서 그 쟁점들을 가지고 좀 더 충실하게 보완된 대답들을 준비해 주면 좋겠다, 그 대답의 내용이 국가교육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면 좋겠고, 국가교육위원들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납득되지 않는다면 그런 내용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반상진 위원님과 이슬기 위원님, 그리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전문위원실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그에 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답변 일정과 보완된 쟁점별 답변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쟁점을 검토한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질문 중 하나이고요.

- 두 번째는 지금 숙의에 관한 보고를 들었는데 180명 참여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숙의과정에서 토론된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 속에서 의견 분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 180명 규모를 가지고 연령별 대표성이나 직군별 대표성이나 이렇게 논해서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논·서술과 관련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교사들의 입장이나 또는 연령별 국민들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면 좀 넓은 표본으로 설계를 해서 국민적인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같은 방식의 설문이 진행되어야 나름대로 전체적인 의견 분포는 어떻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온라인 900 몇 명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해서도 안 되고, 숙의에 참여한 180명 가지고 뭔가 대표성 있는 percentage인 것처럼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 마지막은 질문을 던질 때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서·논술형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이런 식의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단순히 서·논술형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서·논술형을 도입한다고 할 때 해결되어야 할 전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작용이 꽤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논술형 도입하는 것을 당장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당장 도입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장 도입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대답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질문 문항을 만들 때에도 실제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서·논술형 문항 도입 찬성 얘기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설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으로 질문들이 구성되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문조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설문 문항도 국교위에서 한번 검토한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워크숍에서 이 주제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워크숍 결과를 참고해서 쟁점을 정리해서 정리된 방식으로 또 워크숍을 하기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씀들이 새로운 얘기들이 아니고 전부 그때 나온 말씀들과 직접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오늘은 숙의공론 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서 보고사항을 좀 분명히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두 분 더 듣고 이 주제는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연취현 위원님.

○ (연취현 위원) 저는 여러 가지라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 첫 번째는 18페이지에 있는 붙임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직능별 세부분석에 보시면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서 숙의 후에 유·초·중등 학부모, 대학생, 대학생 학부모의 평가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은 특히 대학생이나 대학생 학부모의 경우 이미 입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숙의 후에 평가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에 대한 평가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고, 수능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도 밑에 보시면 학부모들의 우려사항이 유·초·중등 학부모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생 학부모의 우려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의 불안도가 대학생인 경우에 이미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입시가 끝났지만 이 논·서술형이 도입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부모가 느끼고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대표로서 강조드립니다.
-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붙임자료를 보지 못하고 이 회의를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8페이지의 2-1번 문항 보시면 증가된 percentage보다는 '필요하지 않다', '모르겠다',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percentage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2번 보시면 수능에서 오지선다형 문항과 함께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3.3% 증가한 것 이외에 다른 항목들은 전부 다 숙의 후에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형태로 증가되었습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은 질문사항에도 포함되는 것인데요. 10페이지 보시면 2-5번에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이 적절한지 물어보셨는데 논·서술의 경우에 우리가 깊은 사고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보면 점수 비중을 40%

안팎으로 한다는 것인데 문항에 보면 문제수를 늘린다는 평가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질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숙의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위원들이 이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 말씀드릴 요지는 이겁니다. 이토록 여러 계층에 있는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은 것은 우려가 매우 높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아까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찬성이 많아졌다고 하셨는데 2038년 이후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서술형을 수능에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무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논·서술형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고력 과정의 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방향이지만 몇 년 이후에 수능에 논·서술형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 교육과정을 전제로 2038년 이후 교육과정을 실제로 겪는 저와 같은 학부모나 학생 대표들, 또 교육정책가들이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수능에 이제 도입해 볼까를 논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2038년 이후 수능에 우리가 논·서술형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거나 너무 장기적인 관점의 그냥 의견일 뿐이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워크숍 때 질문에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논의가 이미 전제로 되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의 객관식 문항을 일부 줄이고 논·서술형을 넣으려면 논·서술형은 특히 깊은 사고력을 전제로 이 논의를 하고 있다면 좀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능시험 자체가 하루 종일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논·서술형을 40%까지 늘리려면 이틀 수능을 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 수능의 문항수를 확 줄이고 객관식 보고 주관식을 쓰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많은 시험을 겪었지만 제 경험으로는 충분한 사고를 거쳐서 논술형 답이 나오려면, 최소 2~3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 한 문항을 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취지와 목적이라면 이틀 정도의 수능시험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학생과 학부모, 전문가들에게 논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설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요.

- 마지막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2-5번 질문 관련해서 이 percentage가 문항수로 단순히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인지, 채점 기준에서 40% 정도를 논·서술형에 배정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A) 다 받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 (위원장) 숙의 공론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 드리고요. 위원들 간에 토론을 앞으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숙의 공론에 대한 질문에 한해서 답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 (간사) 참고로 토론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매주 목요일,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조금 어렵지만 10월 매주 목요일마다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시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10월 둘째 주, 6일, 7일 정도에는 국정감사가 있는 주여서 그때만 빼고는 1일, 15일, 22일에 가급적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워크숍 또는 정기회의 형식을 다 넣어서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 모아서 합시다. 지금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때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인지 좀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간을 조금 아껴주시기를 바라고요.

- 그러면 장신호 위원님 하고, 김 건 위원님 듣고 이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제안

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서·논술형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인 의견을 모으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또 전하고 소통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그럴 때면 보고자료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논의와 숙의과정과 절차를 거친 이 중요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보고자료 내용이 조금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결과와 결론을 도출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예를 들겠습니다. 설문 문항을 보면 우리 설문 응답 결과에 문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쪽에 보시면 2번 문항에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고 거기에 180여분의 위원들이 답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수능 관련된 문항인데 오지선다형 문항과 함께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한다는 그런 질문으로 의견을 여쭌 것이지요. 그러면 보고서와 뒤에 결론을 이렇게 도출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있는 문항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설문 문항에 대해서 답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우리 보고자료를 넣을 때 그 부분이 아까 이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뒤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일반화를 합니다.

- 그래서 우리 보고자료로 넘어와서 5쪽에 보시면 설문 문항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존 문항에 확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여쭌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서술형·논술형 평가의 기대에 대한 동의가 높다, 그리고 약간 더 일반화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쪽으로 글이 전개가 되면 저는 매우 신중하고 주의 깊게 결론 도출을 하고 일반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확대되거나

확장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설문 문항에 근거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처럼 우리 설문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화를 할 때 국민들이 더 동의를 하고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발표를 해야 국민과 함께 이해를 도모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니까 거기에서 긍정과 부정이 나뉘지요. 긍정이 55%,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약 41%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설문 분석을 할 때 2-3과 2-4를 보시면 특히 2-4부터는 이미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이 40%가 계셨지요. 우리가 보통 설문할 때는 나눕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출제나 확대에 대해서는 답할 필요도 없는데도 그 분들도 계속 답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반대를 하는 분들 180명의 답이 2-4, 2-5, 2-6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 부분이 평가 논리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일반화하고 발표해 드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잘 표현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건 위원님을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 (김 건 위원) 저는 이 공론화 과정에 참석을 일부 했습니다. 하루 종일 숙박을 하면서 전부 보지는 못 했지만 절반 이상의 과정에 참석을 하고 국민참여위원분들께서 논의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사실 직능별 세부분석에서 18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있는데, 데이터가 고등학생 친구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숫자는 적지만 10명이 참석을 해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무도 찬성을 안 했지요.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끝나고 나니까 50%가 찬성 입장으로 입장을 바꾸기는 했는데 사실 그것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55%의 찬성이라는 수치가 수능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써 활용되기는 조금 부족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로 봤을 때 고교 내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미 진행된 지점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20% 이상 이미 수행평가에서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저항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비교적 조금 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다만, 저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숙의 전과 숙의 후에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반대를 하셨던 분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찬성을 하셨던 분들은 반대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특히 또 학부모 위원님들 위주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약간 단편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의 성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사교육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 이런 시사점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공론화를 더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까 이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국민 공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저는 조금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능별 간담회를 몇 번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세부적인 공론 조사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은 물론 전후 설문조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참여하신 위원분들께서 자유롭게 기술해 주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분들이 실제로 토론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것을 저희가 청취하고 듣고 그것을 정리해서 결과로 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회 차원에서 직능별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국민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저희 국민참여위원회 분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위원회 분

들께서는 구태여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황금 같은 주말을 전국 각지에 계신 분들이 화성까지 오셔서 이틀을 반납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하면 여기와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답변하시지요.

○ (보고자 A)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 제외한 숙의 결과에 대한 질문 위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 현 위원님께서 전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질문을 구성할 때 조건부나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질문을 구성할 때 다양한 도입 방식이나 시기나 기대와 우려, 그리고 준비 필요사항에 대해서 다 전반적으로 물어봤고, 플러스해서 이게 한 번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1박 2일 숙의과정을 통해서 사후에 한 번 더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후조사를 하실 때는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셨을 것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 그다음에 연취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질문 2.5에서 전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은 하루에 해야 된다, 이틀에 해야 된다,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고, 그 조건에 맞게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서 진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비중이 점수냐 아니면 그것이 문항 숫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대부분 점수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그다음에 장신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페이지의 서·논술형

평가의 기대에 대한 동의율이 높다고 표현한 것은 저희가 설문 문항 자체를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이고, 그 문항은 11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3번 문항을 보시면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의 기대효과와 우려사항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표현을 본문에도 '동의 정도'라고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문구조에 대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공론화 TF에서 논의를 하다가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묻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이 주제는 넘어갈까 합니다.

- 숙의 공론 전반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진행과정을 보고 또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을 본 사람으로서 숙의 공론에 참여한 분들의 진정성,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찬반 의견을 형성하는 것, 이런 과정을 제가 볼 때는 숙의 공론의 절차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절차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의견수렴 전문위원회가 이 과정을 전부 자세하게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지도를 잘 따라서 진행한 결과, 큰 차질 없이 위원들도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자기 의견을 잘 형성해서 표현해 주었고, 또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서술까지도 성의껏 하고 그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공론화를 더 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공론화를 더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과 회의를 좀 더 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공론화를 더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성을 가지고 국민들께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오랜 워크숍도 하면서 공감한 것이 그러면 채점을 어떻게 하고 채점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채점관 중심으로, 사람 채점을 중심에 둔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고, AI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성이 검증된 조건 하에서 보조적인 도구로는 쓸 수 있으며 안전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미리 밝혀둡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6 차기 회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추후 별도 논의 후 확정

7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위원장) 그러면 제9차 국가교육위원회 본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수고했습니다.